

경제성 논의 분석없이 팽팽한 입장차만 확인

동서고속철도 보완회의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점검회의가 기대했던 경제성 분석 논의 없이 끝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사업을 장기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서고속화철도 예타 조사 1차 점검 보완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1차 점검회의의 결과에 대해 추가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양측의 팽팽한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특히 도가 요구했던 비용 절감 및 수요 확충 방안이 경제성 논의 과정에서 전혀 반영이

안 돼 앞으로 진행될 회의에서도 힘로가 예상된다. 도는 앞선 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열차 1편당 8량으로 운영하려는 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6량으로 축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도의 요구대로 열차를 축소 운행하면 운영 관리비 감소 및 신설되는 역사 규모 축소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52만명 미래 수요를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15일 도와 KDI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오는 26일 2차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성현기자 sunny@

혁신도시 공사과정서 7억여원 가로채

원주경찰 40대 전 LH조경감독 구속

원주혁신도시 공사 과정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챙긴 전 LH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원주경찰서는 15일 원주혁신도시 조경공사를 하면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공사비를 가로채 7억3,6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전 LH조경감독 김모(47)씨를 구속했다.

또 김씨의 돈세탁을 도운 혐의로 김씨의 전 부인 김모(여·41)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김씨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업체 관계자 2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원주=김설영기자 snow0@kwnews.co.kr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7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

종합·전문건설업체 모두 원도급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가 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소규모복합공사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입법예고했었다.

그러나 종합건설업체의 반발이 계속

되면서 그동안 협의, 조정 등을 거쳐 이번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7억원으로 확대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는 소규모 복합공사를 7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면서 종합·전문건설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하위운기자 faw4939@

동계오륜 마지막 공사 물량을 잡아라

도·조직위, 연말까지 3074억원 발주 예정

대형 건설사 눈독에 지역업체 참여 관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건설공사 잔여 물량 확보 전쟁이 뜨거워 지고 있다.

15일 도에 따르면 동계올림픽 건설 관련 잔여 공사 물량은 컬링경기장 보강공사 130억원, 빙상 보조경기장 130억원, 경기장 진입도로 진부역 구간(8.76km) 1214억원, 기존 시설인 스키점프,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개·보수 374억원, 평창조직위가 발주할 올림픽 개·폐회식장 1226억원 등 총 3074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국내 대형건설사들과 도내 업체들은 잔여 공사 물량 확보를 위해 발주 일정과 계획, 조건 등을 파악에 분주하다.

해당 공사들은 테스트 이벤트 등 절대 공사 기간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모두 발주돼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정부가 과다 예산을 이유로 총 사업비를 최종 승인하지 않으면서 절대 공기만 늦춰지고 있다.

도내 업체들이 얼마나 공사에 참여

■동계올림픽 잔여 공사 물량

분야	금액(억원)	발주예정	발주처
개·폐회식장	1226	미정	평창조직위원회
컬링경기장	130	11월말	강원도
빙상보조경기장	130	11월말	"
스키점프·크로스컨트리·바이애슬론	374	미정	"
진입도로(진부역)	1214	미정	"

하느냐도 관심이다.

도내 건설업계는 사실상 연말이면 동계올림픽 관련 공사 발주가 완료되는 만큼 잔여 공사 물량에 지역 회원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라고 있다.

현행 동계올림픽 특별법에 따라 도내 업체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49%까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지역제한 경쟁입찰과 지역업

체 공공수급 참여비율 가산점 부여 등 관련법을 적극 활용해 도내 업체 참여 비중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동계올림픽 주요 경기장 공사 발주는 사실상 마무리 됐고 연말까지 잔여 물량이 모두 발주·완료될 예정"이라며 "지역 업체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련 공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규모 복합공사 4억원 확대 결정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

향후 7억원까지 확대

건설업계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소규모 복합공사' 규모가 4억원으로

확장됐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현행 3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공사 입찰시 종합건설업체에 더 엄격히 적용되는 적격심사기준을 정비 한후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7억원 미만까지 넓힐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4월 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까지 마쳤다.

하지만 종합건설업계의 반발로 정부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축소했다.

한편 복합공사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공사로, 원칙상 종합건설업체만 원도급사로 수주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에는 3억원 미만 소규모 복합공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전문건설업체에게도 원도급을 허용하고 있다. 안은복 rio@kado.net

춘천에 '손흥민 체육공원'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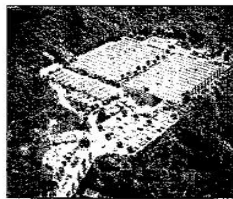
손축구아카데미, 시에 사업서 제출
감정리에 축구·풋살·족구장 등 조성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23·토트넘)의 이름을 딴 '손흥민 체육공원'이 고향인 춘천에 조성된다.

15일 춘천시에 따르면 손흥민의 부친인 손웅정씨가 총감독으로 있는 '손(Son)축구아카데미'는 최근 민간제한 방식으로 '손흥민 체육공원' 조성 사업서를 시에

제출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손흥민 체육공원이 60억원을 들여 내년까지 동면 감정리 소양정수장 옆 임야 7만1400㎡에 체육공원을 완공하는 것이다.

체육공원은 축구장 2면을 비롯해 풋살장 2면, 족구장 1면, 축구 박물관, 체력단련장, 주차장 등으로 구성된다. 춘천시는 전세계



손흥민 체육공원 조감도

축구팬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손흥민을 브랜드로 한 체육공원이 지역 체육과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도시 인지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춘천시는 우선 보전복지인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상 체육공원으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내년 4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손흥민 체육공원'이 바로 착공될 예정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조만간 시도 계획위원회 자문과 부서 검토를 거쳐 이달 중 조성 계획을 공고할 것"이라며 "예정된 시기에 맞게 착공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고 말했다.

춘천/김정호 kimpro@kado.net

춘천 동내면 도로 신설

춘천 동내면 신촌리 산수빌아파트 앞 도로와 향군마을을 연결하는 2차로가 오는 19일 준공된다.

춘천시는 사업비 3억원을 들여 길이 100m, 폭 8m의 향군마을 연결로를 개설했다고 15일 밝혔다.

춘천시는 올해 초 보상을 완료했고, 지난 6월 중순 착공했다.

이곳은 길이 없는 나대지여서 주민들이 통행과 영농에 불편을 겪었다.

춘천/김정호

소규모 복합공사 '3억→4억' 미만으로 확대

국토부 개정안 확정... 당초 '10억' 확대방안서 낮춰

전문건설사가 원도급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가 올해 안에 현행 3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적격심사기준 개정 등을 거쳐 7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종합과 전문 건설사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동구간'이 단계적으로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다음달 초 개정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관련기사3면

지난 4월10일 개정안 입법예고 후 중소 종합건설업계의 대규모 집회 등 반발이 거세자 국토부가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라는 방향은 유지하되 한 발 물러선 것이란 분석이다. 당초 입법예고안은 소규모 복합공사를 1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국토부는 6개월 만에 내놓은 조정안을 통해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현행 3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7

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적격심사기준을 정비한 후 종합과 전문 건설사의 입찰참여를 모두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기존 소규모 복합공사를 4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곧바로 법적 심사를 거쳐 다음달 초 시행령 개정고시를 통해 연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7억원 미만 공동구간 신설의 경우 시간을 두고 적격심사기준 등을 정비해 순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종합과 전문 건설사가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경쟁을 하려면 기술자 보유, 경영상태 등 서로 다른 적격심사기준을 하나로 통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3년 기준으로 3억~4억원 미만 국내 건설공사 시장은 총 2조5400억원 규모이며, 이를 종합건설사(1조4600억원)와 전문건설사(1조800억원)가 6대4 정도로 분할하고 있다. 3억~7억원 미만 공사는 9조1200억원 규모로 종합이 66%, 전문이 34%를 각각 점유한다.

김태형기자 kth@ ▶2면에 계속

1면서 계속=소규모 복합공사
'3억→4억' 미만으로 확대

김정희 국토부 건설경제과장은 "입법예고안에 대한 종합-전문 간 이견이 워낙 커서 4차례의 검토회의 등을 거친 후 건설업계 유연화 취지를 살리면서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조정안에 대해 종합과 전문 건설업계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종합건설업계 관계자는 "전문업체만을 위한 일방향식 정책이라는 점에서 만족할 수 없지만 건설업계에 산적한 과제가 많은 만큼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중단해야 한다"며 "7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기준 등을 정비할 때는 시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업계 기대에 못 미치는 조정안으로 실망스럽다"면서도 "국토부가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의지를 분명히 밝힌 만큼 향후 정책을 통해 실천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형기자

춘천에 '손흥민 축구공원' 짓는다

60억투입, 축구·풋살장·박물관 등 조성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딴 체육공원이 강원 춘천시 동면 감정리에 들어설 전망이다.

15일 춘천시에 따르면 춘천 출신 손흥민 선수를 길러낸 사단법인 '손축구아카데미'는 지난 14일 민간제안 방식으로 손흥민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시에 제출했다.

손축구아카데미가 60억원을 들여 내년까지 축구장을 비롯해 관련 시설이 집적된 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위치는 소양정수장 옆 임야 7만1400여㎡ 규모이며 체육공원 실제 넓이는 7만1000여㎡, 나머지는 진입도로 부지다.

조성 시설은 축구장 2개, 풋살장 2개, 족구장 1개, 축구박물관, 체력단련장, 관리사무소, 주차장 등이다.

춘천시는 사전 검토에서 세계적인 선수

로 활약 중인 손흥민을 브랜드로 한 축구공원이 지역 체육과 경제 활성화, 도시인지를 높이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 보전녹지로 되어 있는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상 체육공원으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시는 조만간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료와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이달 중 조성계획을 일반에 공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4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예정된 시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 선수의 아버지인 손웅정씨가 운영하는 손축구아카데미는 현재 초·중학생 축구 꿈나무 40여명을 공지천 구장을 임대해 지도하고 있다.

NEWS & 소규모 복합공사 3억→4억미만으로 확대... 남은 과제는

종합-전문 입찰 공동구간 신설 '산넘어 산'

종합건설업체의 대규모 장의투쟁을 유발했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논란이 반년여 만에 일단락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15일 종합과 전문 건설업체의 의견을 절충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범위를 4억~7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3억원 미

만에서 4억원 미만으로 1억원만 상향조정해 종합건설업체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한편 7억원 미만 공동구간 신설을 통해 종합과 전문 양쪽의 목소리를 수용했다는 평가다.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가 4억원 미만으로 확대되면 약 2조54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3억~4억원 구간 건설공사에서 증

적격심사기준 등 정비 관련 양쪽 수용할 해법 찾아야

합과 전문의 점유율에 일부 변동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이 구간에선 종합과 전문이 각각 58%와 42%의 공사계약을 점유하고 있다. 국토부는 3억~4억원 구간 건설공사에서 종합과 전문이 경합하는 시장규모를 19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물레이션으로 예측하기 힘들고 현장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시장 변화 폭이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7억원 미만 공동구간 신설은 앞으로 국토부의 종합-전문업체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국토부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7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되, 종합과 전문 건설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준을 7억원으로 정한 것은 전문공사의 지역제한 입찰기준이 7억원이기 때문이다. 공동구간 신설을 위해선 종합과 전문업체 간 서로 다

른 적격심사기준도 정비해야 한다. 계획·관리·조정 역할이 필요한 복합공사를 시행하는 종합건설사와 단순공종의 전문건설사에 대해 동일한 잣대로 시공경험을 평가할 수 없다. 기술자 보유, 경영상태 등의 심사기준도 손봐야 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종합과 전문이 공동구간에서 경쟁하려면 양쪽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적격심사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작업이 만만찮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구간의 범위 설정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국토부 조정안을 보면 공동구간의 범위를 7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한다는 상한선만 정해 놓았을뿐 하한선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다. 자칫 4억원 미만은 기존의 소규모 복합공사를 적용하고 4억~7억원 미만 구간에 대해서만 공동구간으로 운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종합과 전문의 업계체계의 여의조항인 소규모 복합공사에 또다른 예외가 하나 추가된다. 예를 들어 '소규모 복합공사 A'(4억원 미만)와 '소규모 복합공사 B'(4억~7억원 미만)로 다시 쪼개질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 연계 유연화를 통해 발주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꾀하겠다는 제도개선 취지와 달리 더욱 복잡해진 제도만 양산할 수 있다.

다만 국토부가 중장기적으로 업계 연계 유연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동구간 확대를 통한 단계적 업계 연계 유연화에 대한 의지와 방향을 제시한 것 같다"며 "궁극적으로 종합과 전문이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시장을 재편하려면 국토부가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형기자 kth@